

“무임승차 해외기업 규제 강화해 제2 페북사태 막아야”

페북 판결로 본 정책 토론회

글로벌 기업 국내 잠식 유리 우려 가이드라인 집행 강화에 초점두고 인터넷·통신규제 합리화 등 '투트랙' ISP-CP 망이용료 갈등으로 확산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제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던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판결 이후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역할별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글로벌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가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에서도 여야 관계없이 머리를 맞대고, 페이스북 판결로 대표되는 글로벌 사업자의 역할별 문제를 위해 입법적·행정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기업 역할별 문제 뿐 아니라 인터넷기업(CP)과 통신사업자(ISP) 사이의 갈등으로 점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페북 사태’로 드러난 글로벌 역할별 18일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이용자 규제를 위해 국내외 집행력 강화, 인터넷과 통신 규제 합리화 등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의 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 근거를 확대하고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핵심 이슈는 이용자 보호와 글로벌 집행력 확보 문제”라며 “규제 철폐 이슈가 아니라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문제로 봐야 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확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적용대상으로 해외 사업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페이스북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2017년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소송 판결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국내 잠식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달리 망 이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망 이용대가를 사업자 사이의 계약 문제로 남겨둔다면 협상력이 강한 글로벌 CP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기 어렵고 국내 CP의 역할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며 “국내 사업자가 대형 글로벌 CP에게 대응할 수 있다. 대응력이 부족할 경우 상호 접속 고시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이용자 보호는 속지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글로벌 CP도 개별 국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페이스북이 망 접속료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의도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를 담보로 통신사에 위협을 가한 것”이라며 “집행력이 없는 가이드라인보다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업자 vs 인터넷기업 이번 페이스북 판결은 글로벌 사업자의

역차별 이슈와 함께 더 크게는 CP와 ISP 간의 망 사용료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 인터넷 기업들은 이번 소송의 핵심은 높은 망 사용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통신 사업자들의 과도한 망 이용료 부과로 인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망 이용료 부담이 상호전산으로 바꾸면서 지속적으로 망비용이 상승했다”며 “이용자보호 주체는 CP뿐 아니라 ISP도 포함되는 만큼 두 사업자 모두 이용자 보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외의 CP들은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1심 소송 이후 망 사용료 인상을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이른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

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를 내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은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이용자보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정책과장은 “상호접속고시 개정은 트래픽 교환에 대해 새 질서를 부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이를 통해 국내 CP 망 이용료 부담이 과거보다 과도하게 인상됐다면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상호접속제도 연구를 통해 연말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페이스북 사건의 이면은 통신 사업자와 CP 간 망 이용대가 협상 우위 선점을 위한 사업자 간 다툼”이라며 “협상우위를 위해 사업자가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당국, 물가안정에 집중해야”

신인석 한은 금통위원 간담회 사실상 금리인하 주장



신인석 한은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은행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8일 지금과 같은 저물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한은의 금리정책마저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화당국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그동안 금융안정에 더 치중돼 있었던 만큼 물가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마이너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기대인플레이션이 위축되기 전에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인석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면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켜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금통위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힌다. 금리를 동결한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조동철 위원과 함께 ‘0.25%포인트 인하’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신 위원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

은 2012년 2.2%를 기록한 뒤 2013~2018년 평균 1.3%로 하락했다. 올해 들어서 0%대로 더 떨어졌다. 8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0%)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를 6년간 하회한 셈이다.

신 위원은 “경제 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은 과거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며 “6년간 계속 낮아진 물가 상승률이 경제 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하락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2013년말 2.9%에서 올해 8월 기준 2.0%로 하락했다.

/김희주 기자 hj89@

롯데칠성음료

뜨거운 도시를
대시 청량한 색으로

초록이 지켜지는 세상

Re:fresh Re:green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에 유의하세요